

광주시·전남도 내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확보

첫 2조 돌파, 지역경제 활성화 탄력

광주시

광주시의 내년 정부예산은 2조 2,102억원이 반영됐다. 올해(1조 9,743억원)보다 2,359억원(11.9%) 늘어난 규모다.

가장 큰 성과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일자리와 연계한 4차산업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업비 486억원을 요청해 정부예산에 191억원만 반영됐으나 259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어 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게 됐다.

일자리와 연계한 4차 산업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성(6억원)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15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20억원) ▲지역AR·VR제작 지원센터 구축(14억원) 등 사업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형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총 사업비 1,016억원)은 빛그린산단과 진곡·하남산단 간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교통편의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 10억원이 반영됐다. 광

수영대회·4차산업 등 현안 지원 교두보 광주형 일자리 기반 조성 예산 확보 성과

주노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은 총 4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적정임금 기반 노사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의 거점 마련에 따른 시설 설계용역비 등 20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성은 총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융복합단지 조기정착 및 활성화 등 거점기관 구축에 따른 시설 설계 용역비 6억원을 확보했다.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은 총 1조 4,24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광주·전남의 남북방면 접근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1,138억원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총 6조 3,087억원 규모의 초대형 SOC사업으로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설득한 결과 사전 타당성용역 수립비를 확보했다.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남을위한 행정국 대중화·세계화 9억원, 국립광주국악원 건립 관련 용역 2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간) 전철화 10억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간) 확장 1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5건 299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문화·관광분야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30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58억5,000만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4억원) 등 6건 216억원이다.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환경 분야 등으로 ▲장애인수련시설 건립(15억9,000만원) ▲광주지하역사 미세먼지개선환기시설비(5억6,000만원) 등 6건 301억원이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발 빠르게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반영 단계에서는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용섭 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동차·에너지·문화 등 3대 벨리사업 등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달라고 내실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예산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정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예산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고, 전남도는 3년 연속 국비 6조원 이상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동차·에너지·문화 등 3대벨리 사업 등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됐고, 전남도는 오랜 숙원인 경전선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등이 반영된 점이 두드러진다.

올해보다 ‘8천억 증가’ 7조시대 성큼

전남도

전남도의 내년 정부예산은 6조 8,104억원이 반영됐다. 올해(6조 16억원)보다 8,088억원(13.5%) 늘어난 규모로, 3년 연속 국비 6조원 이상을 확보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SOC예산이 대거 늘어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SOC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 50.9%가 늘어난 1조 2,121억원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4,090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여수엑스포 이후 최대치다.

이중 경전선 전철화(광주송정-순천) 사업(10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인정받아 88년 만에 철도 현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는 5억원이 반영돼 2021년 광주 민간공항 통합에 따른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보잉 747기 등 대형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두 사업은 그동안 지역민의 염원에 해마다 국고 반영에서 누락됐지만, 민선7기 출범 이후 김영록 지사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추진해 내년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이밖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660억원(국회증액 400억원) ▲광주-완도

SOC사업예산 여수엑스포 이후 ‘최대치’ 경전선 전철화·무안공항 활주로 등 성과

간 고속도로 건설 1,834억원(국회증액 1,138억원)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3,900억원(국회증액 1,000억원) ▲여수 광양항 석유화학 부두 돌핀시설 건설 30억원(국회증액 29억원) ▲흑산공항 건설 10억원(국회증액 10억원) ▲화순 동면-순천 주암 국도 시설개량 60억원(국회증액 10억원) 등도 대거 반영의 성과를 거뒀다.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는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10억원(국회증액 10억원) ▲빛가람 복합 혁신센터 건립 60억원(국회증액 44억원)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26억원(국회증액 3억원)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 30억원(국회증액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5억원(국회증액 5억원) ▲해양경찰 서부정비항 구축 28억원(국회증액 28억원)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 건설 17억원(국회증액 17억원) ▲제1회 섬의날 행사추진 7억원(국회증액 4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III지구) 177억

원(국회증액 80억원) 등이다.

관광·문화분야는 ▲국립한국정원센터 건립 2억원(국회증액 2억원)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고도화 3억 3,000만원(국회증액 3억3,000만원) ▲해남 오시야노 관광단지 국민휴양마을 조성 26억원(국회증액 10억원) 등이다.

이 같은 성과는 김영록 지사가 여러 차례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을 방문해 이해당사자들과 면담, 3당 원내대표 등 여야 수뇌부를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설득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소 설립, 페플라틱 산업화 기술 실증 기반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 사유로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았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처사는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계획을 세워 조기에 사업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증액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원인을 분석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당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촛불혁명의 심장, 광화문으로’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원 예산확보 ‘자화자찬’ 홍보

2020년 총선 앞두고 지역민심 잡기 ‘올인’

국회가 올해 보다 40조원 가량 늘어난 469조 5,752억원 수준의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확보 내용을 ‘자화자찬’ 식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의원들의 예산확보 내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지역의 민감한 현안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예산 확보 액수와 건수를 지역민들이 의정 활동 역량과 동일시 하는 풍토도 한몫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의원은 여수시 국비예산 4,87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화양-적금 연륙·연도

교 가설 565억원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5억원 ▲여수광양항 석유화학 부두 돌핀시설 건설 30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도 2,353억원을 확보했다.

주 의원은 “당초 정부는 화양-적금 연륙·연도교 가설예산을 90억원만 세워 2019년 개통이 어려웠으나,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추가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내년 후반기인 2019년 하반기에 여수-고흥 전체 개통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남)의원은 정부와의 지속적 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19년 지역발전 예산

1,13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300억원의 예산은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 추가됐다.

박 의원은 “세계 문화자원이 집적되고 교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광주의 국제적 이미지를 상승시켜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최고의 여향도시를 이룩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의원은 광주 미래를 이끌어갈 에너지산업과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구축(6억원), 첨단실감콘텐츠클러스터(58억

5,000만원), 광융합산업생태계 기반 조성(5억원) 등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광주·전남 속원사업인 광주세계수영대회 지원사업(230억원)을 비롯해 경전선(기초조사설계비 총액 550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개설(550억원), 남해안철도 건설 및 전철화(1,000억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SOC 사업이 포함됐다.

무소속 손근주(나주·화순)의원은 총 3,76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호남 SOC 예산중 호남 KTX(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370억원,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에 1,195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 반영한 사업만 7개 사업 총 81억원에 달한다. /서울=강병은 기자

아파트 품질검수단 강화, 부실시공 차단

정광호 도의원 개정조례 발의...도민안전 담보

전남지역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품질검수단의 기능이 강화된다.

전남도의회 정광호(신안2)의원은 최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품질검수단 검사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



한다.

점검단은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품질검수단의 기능을 강화, 도내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지진안전성 표시제’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나광국 도의원 조례발의...지진 안전성 확보

앞으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임을 인증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대상이 전남도내 모든 민간건축물로 확대된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무안2)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도민들에게 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통한 민간건축물의 안전성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도가 건물의 안전 및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고, 민간 건축주들 스스로가 건축



물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을 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진에 취약한 민간건축물이 자연스럽게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은 “도내 민간건축물, 특히 내진 설계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한옥과 농가주택 등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건축물이 지진에 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